

제네릭 출시 75% 차질… 연구개발 ‘빈익빈 부익부’ 우려도

m-커버스토리

약가 인하 실효성 논란

제약사 규모에 따라 매출손실 차이
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가능성 높아
“금융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 필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더 높아지고 글로벌 진출이 막 시작된 K-제약·바이오 산업은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약가 인하의 과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형 제약사만 살아남나…공포 커져

7월 시행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맹점은 약가 인하의 충격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진행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손실률이 전체 10.5%로 가장 컸다. 대형 기업(4.5%)의 두배가 넘는 규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다.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 역시 중견기업 3653품목으로 전체 75.1%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비 투자 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발 위축도 중견기업(26.5%)과 중소기업(24.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제네릭 출시 계획도 상당수 미뤄지며 사업 축소 우려도 현실화 됐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중 중견기업이 31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시장은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한 충격과가 산업 전반으로 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제약산업 전망’을 통해 제네릭 외 제품(수출의약품·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글로벌 판매, 기술수출 등이 실

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대형 제약사의 외형성장세 지속가능할 전망”이라며 “제네릭 신규 개발에 따른 이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이 역시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한신평은 “R&D 투자는 제약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도 “다만, 일부업체는 영업 창출 현금으로 연구개발비 충당이 어려워, 업체 간 영업현금 창출력 등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약가 인하 후 환자 부담 더 늘었다

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되레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약가인하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보장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실제로 KPBMA 정책보고서의 ‘약가

인하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시 소비자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인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증가는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소비자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한다”며 “수입의약품 판매 증가는 소비자 약품비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안 시행 이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약가 인하의 예상 효과를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건보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펀드,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투자 여력 부족한 중소 제약사 생존 불투명”

≫ 1면 ‘약가제도 개편…’서 계속

국내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살기 위해선 변해야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체질 개선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특히 전체 약품비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제네릭이란 캐시 카우 없이 신약 개발 투자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약가 인하 목표가 의료비 절감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R&D, 설비 투자가 이뤄지는 데 이 현금흐름이 사라지면 체질 개선은 커녕 당장 생존도 불투명해진다”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들이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약가 인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이루려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이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선순환 투자에 대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며 “약가인하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재원 만큼 산업에 재투자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연초부터 불붙은 증시… ‘1월효과’ 가시화

통계상 연초에 증시 상승 흐름 보여
기관 자금집행·기업 실적발표 등 영향

국내 증시가 2026년 개장 첫날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시장에는 장밋빛 전망이 넘치고 있다. 과거 통계상으론 연초엔 증시가 상승하는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새해를 맞은 증권가를 들뜨게 하고 있다. 통상 1월엔 기관 투자자의 신규 자금 집행이 시작되고, 연말 보너스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韓, 통계적으로 1월 증시 강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산출 기준시점인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12%로, 11월(2.48%), 7월(2.18%)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다. 연도별 1월 수익률은 46회 중 24회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22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코스닥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69%로, 열두달 중 가장 높았다. 4월이 2.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11월(2.28%), 2월(1.93%), 3월(1.11%), 12월(0.66%) 등 순이었다.

1월에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것은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종목을 매도한 뒤, 새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스시스

들어 다시 사들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에는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각종 이벤트들이 속속 열린다. 우선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된다. 삼성전자는 8일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 회사는 4분기에 호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4분기 연결 실적에 대한증권사 전망치(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46.5% 증가한 16조45억원, 매출액은 11.8% 증가한 88조6181억원이다. LG전자는 매출 23조5597억원, 영업적자 119억원이 예상된다.

오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도 주목을 받는다. 올

해 CES에는 853 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국가별 참가 순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 증권가 상승흐름 지속 전망

증권가에서는 올해 1월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투자수익률(ROI) 의구심을 가이던스로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라며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 AI 전반 밸류체인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국내외 실적 시즌이 1월에 본격화되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코스피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7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수세도 긍정적이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주식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자본시장 개혁 정책 등이 추가 유입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시를 흔들 위협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충격, 무역 장벽, 미국 노동시장 약화, 물가 등이 거론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산업계,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임박

삼성·SK ‘역대급’ LG ‘부진’ 현대차 ‘안정’

삼성전자 영업이익 146% 증가 전망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계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업 호조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반면 LG전자는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여파로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전체 실적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서만 매출 88조 6181억원, 영업이익 16조45억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75조7883억원)은 11.8% 늘고, 영업이익(6조4927억원) 대비 146.5%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매출 33조7000억원, 영업이익이 최대 1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4분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관세 부담과 전사적 인력 효율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23조5597억원, 영업이익자 119억원 수준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22조7615억원)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1353억원)은 적자 전환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전자 부품 자회사인 LG이노텍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로 인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성,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컨센서스 기준 4분기 매출은 48조 6464억원, 영업이익은 2조8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0.6%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이 수익성 악화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가 비교적 안정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이전 대비 증가한 모습”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AI 수요 증가,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담 완화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